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찬미안·하이텔·나우콤/ PSPD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자님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담당: 박원석, 796-8364)
제 목 선관위 방문, 선거비용 철저실사 촉구
날 짜 1996. 6. 14. (총 6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선관위 방문, 선거비용 철저 실사 촉구

일시 및 장소: 1996. 6. 14. 오전 10시 과천종합청사내 중앙선관위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吳在植) 朴元淳 사무처장은 6월 14일 오전 10시 중앙선관위를 방문, 사무총장과 면담하여 선거비용에 대한 엄중 실사와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2. 15대 총선은 통합 선거법 제정 이후 처음 치뤄진 국회의원 선거라는 점에서 어느때 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사상 최악의 돈선거'라는 평가를 받고 말았다. 게다가 중앙선관위가 공식집계해 발표한 선거비용의 수입, 지출 내역 또한 당선자와 낙선자, 여야 구분없이 한결같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3. 이에 참여연대는 철저한 선거비용 실사를 통해 위법자 전원을 처벌하고, 공명선거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중앙 선관위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철저한 실사를 위해 선거과정을 감시해 왔던 시민운동 단체와의 공동실사를 제안했으며,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선거관리의 구조적인 허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해 보는 공청회 등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할 것도 제안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선거관리 인원의 확대, 민간단체의 참여,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철폐 등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요구하였다.

▣별첨자료▣ 선거비용실사에 대한 의견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배 김창국 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8-4745 천리안 하이텔 나우콤/ RSPD

문서번호 참연-96-605
수 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제 목 선거비용 실사에 대한 의견서
날 짜 1996. 6. 14. (총 5쪽)

선거비용 실사에 대한 의견서

-
1. 공명선거 구현과 깨끗한 정치풍토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지난 94년 9월 창립하여 현재 의정·사법감시등 국가권력 감시와 사회복지, 인권, 부패방지등 다양한 분야의 활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 입니다.
 3. 15대 총선은 통합선거법 제정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라는 점에서 어느때 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루어 질 것으로 기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선거과정에서 목격한 부정의 실상과 선거이후 부분적으로나마 들추어지는 위법의 사실을 목도하며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4. 특히 지난 18일 선관위에서 공식 집계한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 공개를 지켜본 국민들은 유권자의 체감비용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출마자들의 한결같은 '거짓말'에 회의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5.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행동이며 법치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행위 입니다. 따라서 선거를 다시 치루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한 실사를 통해 위법자 전원을 처벌함으로써 법치의 기강을 새롭게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6. 참여연대는 이러한 뜻을 보다 분명히 전달하고, 선관위의 엄정 실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7. 귀 기관의 책임 있는 검토와 답변을 기대 합니다. 끝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배·김창국·오재식

선거비용 실사에 대한 의견서

공정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관위원장님 이하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대 총선은 '돈은 막고 입은 쏜다'는 취지의 통합선거법 제정이래 처음 치뤄진 역사적인 국회의원 선거라는 점에서 어느때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거가 시작되자 이러한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으며, '사상 최악의 돈선거'라는 것이 선거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과 언론의 한결같은 평가입니다. '20당 10락'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막대한 홍보비와 유세장 박수부대 동원비, 운동원 인건비등 겉으로 드러난 비용만도 엄청난 규모였으며, 법정비용을 지킨 후보자는 오히려 극소수라는 것이 유권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이후 이러한 사실의 대부분은 그 실상이 은폐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만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거 초기부터 '이번에야말로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여 '선진 정치문화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처를 누차에 걸쳐 공언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수차례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선거 이후인 지난 4월 18일 야당 총재와의 영수회담 석상에서도 "상당수가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 강력한 선거사정의 뜻을 내비친바 있습니다. 또한 김석수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 3.24 담화를 통해 "아무리 사소한 부정선거 사례도 단호히 의법조치 할 것"이며 "선거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위법행위로 당선됐을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 차원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이번만은 추상같은 법집행으로 부정선거를 엄벌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언과는 달리 본격적인 선거사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부와 검찰은 어느새 이같은 다짐을 잊어버린 듯 '정국 안정'의 명분하에 몇몇 당선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18일 완료된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 공개가 단적으로 부실사정의 후과를 보여준 사건에 다름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후보들이 제출한 선거비용 신고 내역이 사실 그대로라면 이번 총선은 사상유례 없는 철저한 공명선거로서, 부정부패로 얼룩졌던 과거사를 청산하고 선진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한국 정치사의 혁명적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선자와 낙선자 그리고 여야의 구별없이 마치 각본에 따라 연출한것 처럼 '청렴 지수(指數)'를 밝히고 있지만, 이는 조금만 따져봐도 곧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자민련의 박규식 후보와, 김화남 당선자도 회계보고 상으로는 법정 선거비용 준수를 주장했으며, 최근 기소된 신한국

당의 김호일 당선자 또한 6천 3백 2십여 만원으로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에 한참 못미치는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신한국당 노기태, 전용원, 김학원, 김석원 당선자 자민련의 조종석, 김고남 당선자 그리고 10억원대의 자금을 살포한 지급내역서가 적발되어 검찰이 수사에 나선 성남 분당의 권현성 위원장등에 이르기까지 선거자금의 의혹을 받고 있거나, 사실로 폭로 되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인사들 전원이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의 표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진대, 그밖의 당선자는 물론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낙선자들의 선거비용 신고 액수도 믿기 어려운 거짓임을 짐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과연 전체 235개 선거구에서 출마한 1천 3백 55명의 후보중 법정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준수한 후보가 얼마나 될지 깊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회계보고가 완료됨에 따라 "1천 7백명의 실사반을 투입하여 6월 말까지 현장 실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안에 담당 기관이 분명한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우리는 선관위의 실사계획을 환영하며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역대 선거에서 선관위가 보인 무기력에 대한 회의감과 엄정성에 대한 일말의 의혹 때문입니다. 법정선거 비용에서 평균 40여만원만 더 써도 당선이 취소되는 엄격한 선거법을 가지고도 금권이 난무하는 선거, 법대로 한다면 당선자가 얼마나 남을지도 모르는 사상 최악의 돈선거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책임의 일단은 초기부터 불법부정선거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선관위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번 실사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제한된 실사, 표적실사에 그친다면, 선관위는 회복할 수 없는 국민적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임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비용에 대해 정치권은 '선거법의 비현실성'과 '유권자 의식의 저열함'을 반론으로 제기 합니다. 물론 현행 선거법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 안드는 선거를 통하여 선거혁명을 이룩하겠다는 명분아래 여야 합의로 제정된 현행법을 한번도 제대로 지켜보지 않고 그 개정부터 입에 올린다면 이나라의 법치주의는 어디서 찾아 볼 것이며, 그러한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마음놓고 국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선거비용 실사 과정에서 다수의 당선이 무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로인한 다소간의 정치적 불협화음과 혼란이 오더라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일관된 기조로 이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역량의 한계 때문에, 또는 정치적 외압으로 인해 선관위의 철저한 실사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이에 적극 협력하여 부도덕한 정치인들을 심판하는데 시민적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작금, 부도덕하고 타락한 정치인을 양산하는 악순환적 선거풍토의 개선 없이 우리 정치는 단 일보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관행화된 권력층의 부패가 사회 제반의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우리사회의 부패구조 또한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관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국민적 염원을 대행하는 책무를

상기하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선거사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당면 선거비용 실사와 선거사범 처리에 대한 선관위의 작업을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며,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에 협조할 것입니다.

이같은 취지에서 참여연대는 당면 선거비용 실사와 선거사범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의와 의견을 제기합니다. 선관위의 책임 있는 검토와 답변을 요합니다.

1. 김석수 선관위원장님은 법정선거운동이 개시된 지난 3월 24일 "아무리 사소한 부정선거 사례도 단호히 의법조치 할 것"이며 "선거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위법행위로 당선 되었을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골자의 담화를 발표 하셨습니다. 법에 따라 부정선거를 엄단하겠다는 선거 감독기관 수장의 강력한 의지를 접한 국민들은 환호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선관위원장님과 선관위의 그러한 의지가 추호도 경감된 것이 아닌지 다시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2. 지난 5월 20일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가 개시된 이래 그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는 아니더라도 선거비용 신고 종료부터 현재까지 선거비용 실사의 방식과 진척 단계, 어려움, 그리고 향후 실사방향 및 계획등에 대한 중간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이는 국민적인 관심을 더더욱 환기시키고 제보를 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특정인을 지명함으로써 증거 인멸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면 이를 공개하여 국민적인 지지와 협조를 얻는 투명한 실사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선관위는 '선거비용 축소 신고의 의혹이 짙은 후보나 과열혼탁 양상을 빚은 후보 1백여 명을 선정 이들에 대해 「중앙특별실사반」 을 투입해 집중 조사키로' 했습니다. 또한 그 선정 기준으로 '▶축소신고 의혹이 짙은 후보 ▶검찰·경찰로 부터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후보 ▶총선과정에서 과열 양상을 빚은 40여개 지역후보' 등을 거론 하였습니다(중앙일보 5월 15일자). 우리는 이렇듯 선관위가 특별실사 대상을 설정한 것은 매우 타당하고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이들에 대한 내사는 전체 선거비용 실사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라고 생각 됩니다. 선관위는 현재 이들의 위법 사실의 발견 여부와 그 내역을 밝힐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4. 중앙선관위는 5월 20일 선거비용 실사 작업에 들어가면서 6월말까지 선거비용실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발표 했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조금 넘는 기간에 선거비용 실사를 완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선관위가 예정대로 6월말까지 선거비용 실사를 종료 한다면, 이는 본래부터 철저한 실사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애초에 언명한 실사 기간을 연장하고 철저한 실사가 완료될때까지 실사작업을 계속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5. 선거비용 실사가 시작된 이후 후보자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처, 선거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간에는 이미 선거비용에 대해 서로의 말을 맞추고 서류상으로도 흠잡을수 없을 만큼 완벽을 기했을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선거과정을 가까이서 지켜 보았던 유권자들과 선거를 감시했던 시민운동 단체들의 제보가 무엇보다 강력한 실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선관위의 제한된 인력등을 고려할때도 철저한 실사를 위해 민간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런점에서 선관위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지금까지 내사 사실을 공개하고 관련 지역단체들의 협조를 요청한다면, 구체적인 위법 사실이 더잘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며, 늦은감이 있지만 더욱 철저한 실사를 위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의 공동실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6. 현행 선거법에 따르자면, 이번 4.11 총선의 공소시효 만료는 10월 10일 입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법적 구속과 책임이 종결되는 시점일 뿐 여타의 책임은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없을 따름이지 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공소시효가 만료 되더라도 지속적인 실사와 사정작업을 통해 위법자들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음 선거에 서라도 함부로 부정을 저지르거나 선거비용 위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선관위의 투철한 공명선거 의지가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의 구조적인 허점이 여러가지로 지적 되었습니다. 특히 선관위의 제한된 인력으로 방대한 선거운동 지역과 위법의 현장을 적발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역부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 인원의 확대, 민간단체의 참여,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철폐등 선거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관련해 참여연대를 포함하여 그간 선거관리의 보완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온 시민단체와 공청회등의 공동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선관위의 의견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 이상에 대해 선관위의 책임있는 검토와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1996. 6.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